



미국 : 워싱턴주, 농업 노동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소송 제기, 대법원 심의 진행 중

2020년 9월 현재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 대법원은 현재까지 노동법에서 보호를 가장 적게 받아왔던 농업 노동자들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를 심의하고 있다. 마르티네즈-쿠에바스 대 데루터 브라더스 낙농장(Martinez-Cuevas v. Deruyter Brothers Dairy) 사건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과 경찰의 인종차별 문제 등에 가려져 언론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호세 마르티네즈-쿠에바스(Jose Martinez-Cuevas)와 패트리샤 아귈라(Patricia Aguilar)로, 데루터 브라더스 낙농장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농업 노동자는 워싱턴주의 최저임금법 중 초과근무 관련 보호 적용이 제외된다. 원고들은 적용제의 조건이 생겨난 이유를 인

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찾는다. 사실 이와 같은 적용제의 조건의 근본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많은 역사학자와 인종차별 문제 연구자들이 위와 같은 적용제의 조건이 생겨난 이유가 흑인을 노동법에서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최저임금법에서 농업만을 특별히 제외할 이유가 인종차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농업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되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의 결정에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¹⁾

1) NPR(2020.8.2), "Washington Farmworkers Ask State Supreme Court For Overtime Pay", Retrieved on Sep 4th, 2020, <https://www.npr.org/2020/08/02/897211483/washington-farmworkers-ask-state-supreme-court-for-overtime-pay>

미국 : 비대면 방식의 노동 조직화 확산

팬데믹 이후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워싱턴포스트」 최근 기사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노동 조직화에 대해 다루었다.¹⁾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데다 높은 실업률과 작업장 폐쇄 등으로 노동 조

직화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Zoom과 같은 온라인 소프트웨어는 대기실 기능, 투표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대면 방식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



무와 삶의 균형을 잡기 힘든 노동자의 경우, 온라인 방식을 통한 디지털 미팅에 훨씬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고용주의 눈에 거슬릴까 두려워 대면 모임을 꺼리는 소극적인 노동자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연방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에서는 조합원 선거나 고충 제기 등을 포함한 노동계 활동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 통계가 노동운동의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전통적 방식

의 노동조직화 지표(노조가입률 등)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었던 ‘Fight For \$15’나 온라인 노동운동 플랫폼인 ‘Coworker.org’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가 최근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 추세를 가속화한 것은 분명하다. 기술적으로나 조직적 측면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노동운동이 팬데믹 이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The Washington Post(2020.9.11), “Workers and unions are organizing on Zoom and other digital tools”, Retrieved on Sept. 22nd,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9/10/unions-zoom-pandemic/>

미국 : 후임 대법관 지명이 노동계에 미칠 영향

미국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가 주요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지니고 있는 높은 위상과 대법관의 종신 임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각 5명, 4명씩 균형을 이루던 상황에서 진보 대법관의 사망은 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 당시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후임 지명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후임을 지명할

것이라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NBC 뉴스는 유력 지명 후보로 꼽히는 두 대법관 후보(Amy coney Barrett, Barbara Lagoa)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지명이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¹⁾ 특히 진보성향 시민단체 전국고용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의 주디 콘티(Judy Conti) 디렉터는 “그들의 이름이 유력 후보로 오르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믿을 만한 보수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UCLA 법학 교수인 애덤 윙클러(Adam Winkler)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

명자는 확실히 친기업 및 반소비자 성향을 강력히 보일 것이며, 트럼프의 사법부 지명은 소비자 보호를 축소하고, 노동자와 노조의 권한을 제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후보 중 한 명인 라고아 대법관 후보의 경우, 이미 마이애미 비치에서의 최

저임금 인상 시도를 거부한 바 있다. 주요 사회 이슈들에 영향을 미친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을 감안해 보면 이번 대법관 지명이 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포함한 주요 노동 이슈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 NBC News(2020.9.21), “Trump’s front-runners for the Supreme Court create concern for employee, consumer advocates”, Retrieved on Sept. 23rd, 2020, <https://www.nbcnews.com/business/economy/trump-s-front-runners-supreme-court-create-concern-employee-consumer-n1240625>

독일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 현황

독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감소한 수입을 정부가 보충해 주는 형식의 근로시간단축지원(Kurzarbeitsgeld)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제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 수는 8월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IFO 경제연구소가 자체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바 있다.¹⁾

2020년 7월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 수는 약 560만 명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46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의무가 있는 노동자 중에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 역시 17%

에서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IFO 연구소의 노동시장전문가인 세바스티안 링크(Sebastian Link)에 따르면 도소매업 및接客업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감소폭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IFO 연구소의 추정치에 따르면 제조업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 수는 2020년 7월 약 210만 명에서 8월 19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조업 분야 전체 노동자의 약 27%(7월 약 30%) 정도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속 산업의 경우 7월에는 해당 분야 전체 노동자의 45%에 해당하는 약 50만 9천 명이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았으나 8월에는 약 46만 5천 명으로 감소하며 해당 분야 전체 노동자의 4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자동차



조립 업종은 7월 약 42만 3천 명(38%)에서 8월 약 34만 7천 명(31%)으로, 기계 조립 업종은 7월 약 37만 8천 명(35%)에서 8월 약 33만 6천 명(31%)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자 산업의 경우 8월 기준으로 해당 분야 노동자의 29% 수준인 약 23만 4천 명이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 있어 7월의 약 27만 1천 명(34%)보다 약 3만 7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 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接客업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노동자의 42% 수준(약 46만 5천 명)에 달하였던 7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수급자 수는 8월에 약 37만 7천 명으로 감소하며 해당 분야 노동자의 34%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업종도 지난 7월 약 60만 3천 명(26%)이었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 수가 8월에는

약 45만 7천 명(20%)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운송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약 25만 6천 명(14%)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소매업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자가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는데, 7월에 약 63만 7천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8월 들어 약 41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약 24만 명(10%)에서 약 10만 4천 명(4%)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7월 약 25만 7천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8월 약 21만 명으로 감소하여 해당 분야 노동자의 약 18%에서 약 15%로 감소하는데 그쳤다. 자동차 매매업은 해당 분야 노동자의 약 21%(약 14만 명)에서 약 15%(약 10만 명)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 IFO 언론보도용 자료(2020), "IFO Institut: Zahl der Kurzarbeiter sinkt auf 4,6 Millionen", 2020년 9월 3일자, <https://www.IFO.de/node/57763>

독일 :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따라 2014년 대비 2018년 임금격차 감소, 독일 노총(DGB)의 최저임금 효과를 인정하면서 최우선 목표는 협약임금 인상과 단협적용을 확대임을 견지함

독일연방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4년 대비 2018년 독일의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¹⁾ 통계를 분석한 학자들은 이와 같은 임금 격차의 감소가 2015년부터 시행된 법정 최저임금제도

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 노총(DGB)은 역사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의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을 지지한 바 있으며, 최근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노총(DGB)의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코어첼(Stefan Körzell)은 언론보도용 자료를 통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다. 이제 과제는 현재 12유로(한화 약 1만 6천 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상하여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라고 법정 최저임금과 관련한 독일 노총(DGB)의 기본적인 시각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총(DGB)의

임금 정책에 있어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독일 노총(DGB)의 최우선 목표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단체협약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²⁾

법정 최저임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협약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노동조합 진영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정 최저임금과 협약임금에 대한 독일 노총(DGB)의 대응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Destatis(2020.9.14), “Lohnspreizung: Abstand zwischen Gering- und Besserverdienenden nimmt ab”,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9/PD20_354_623.html;jsessionid=CC4E8A43440A775750CD3A0F3E884B09.internet8722

2) DGB(2020.9.14), “Lohnstatistik belegt Wirkung des Mindestlohns”, <https://www.dgb.de/presse/++co++e051e76c-f682-11ea-a77b-001a4a160123>

스웨덴 : 근로환경청, 코로나19 위험 근무지 내 임신부의 근무 중단 결정

스웨덴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해당 여성의 근무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¹⁾

근로환경청은 Värmland 지역 병원 내 코로나19 병동에서 근무하던 임신 중인 간호사의 근무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를 스웨덴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근로환경청은 임신 중인 여성의 근로생활은 여성

의 전반적 건강에 도움이 되나 코로나19가 태아와 산모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급적 임신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을 택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근로환경청의 전염병 전문가 예니 페르손 블롬(Jenny Persson Blom) 씨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최근 산모의 코로나19 감염이 미숙



아 출생과 제왕절개의 확대, 태아의 발육 지연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기에 임신부는 코로나19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 보건당국(Folkhälsomyndigheten)은 그동안 임신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중한 상태

로 빠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임신부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보건당국은 임신 후기에 호흡기 질환을 경험하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임신 후기 여성에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1) Arbetsmiljöverket(2020.9.18), “Gravida och covid-19 på arbetsplatsen - försiktighetsprincipen ska råda”, <https://www.av.se/nyheter/2020/gravida-och-covid-19-pa-arbetsplatsen--forsiktighetsprincipen-ska-rada/>

영국 :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 노동자 상당수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정책을 완화한 영국 정부는 주요 도시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 초부터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기업에 요청해왔으나,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씹크탱크 센터 포 시티(Centre for Cities)가 영국 내 63개 주요 도시의 휴대전화 추적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출근하는 노동자 수(worker footfall)가 6월 말에 이어 8월 말에도 봉쇄정책 이전의 17%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별로는 런던(13%), 리즈(Leeds, 13%) 등 대도시에서 출근하는 노동자 수는 매우 적은 반면, 맨스필드(Mansfield, 42%), 배질던(Basildon, 38%) 등 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봉쇄정책 완

화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39%에 달했다. 특히 도심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IT 관련 및 전문직 분야에서 75%의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지속했다. 반면, 건강 및 사회복지 분야(14%)와 건설 및 제조업(20%)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도시 노동자의 직장 복귀가 더딘 것은 “도심의 밀집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알렉스 브래지어(Alex Brasier) 영란은행 금융안정전략 이사(Executive Director for Financial Stability Strategy and Risk)의 발언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대중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 그리고 등교 중지 등도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²⁾

- 1) 한편, 블랙풀(Blackpool) 방문객 수가 봉쇄정책 이전의 141%에 달하는 등 해변에 위치한 소도시들의 방문객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The Guardian(2020.9.10), “No rise in workers in UK city centres despite back-to-office plea”,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sep/10/no-rise-in-workers-in-uk-city-centres-despite-back-to-office-plea>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 유동적 성별(Gender-fluid) 노동자에 대한 차별 관련 소송에서 패소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 재규어 랜드로버에서 일했던 테일러(Taylor) 씨가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20여 년간 엔지니어로 일해온 그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 옷을 일상적으로 입기 시작했다. 테일러 씨와 그의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 직장 동료들의 모욕과 심한 농담이 시작되었으며 화장실 이용 및 전반적인 관리 지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퇴사한 테일러 씨가 퇴사를 철회하고자 했을 때도 재규어 랜드로버는 그가 성전환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거절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고용심

판원(employment tribunal)은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와 이에 대한 재규어 랜드로버의 세심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테일러 씨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테일러 씨에게 18만 파운드(약 2억 7천만 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¹⁾

영국 내에서 이번 판결은 이분법적인 성별을 넘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도 「평등법」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데이브 윌리엄스(Dave Williams) 재규어 랜드로버 인사부 이사(Executive director of HR)는 “재규어 랜드로버를 대표하여 테일러 씨가 겪은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²⁾

- 1) BBC(2020.10.2), “Gender-fluid worker wins £180k in Jaguar Land Rover tribunal case”, <https://www.bbc.com/news/uk-england-coventry-warwickshire-54389785>
- 2) BBC(2020.9.16), “Gender-fluid worker wins Jaguar Land Rover tribunal”, <https://www.bbc.com/news/uk-england-coventry-warwickshire-54180794>



프랑스 : 2020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약 15만 여 개 감소

프랑스 통계청(INSEE)의 9월 8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15만 8,200개 감소했다. 이는 8월 초 발표된 수치(11만 9,400개) 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1분기 49만 2,200건의 일자리 감소 수치가 포함된 것이다. 봉쇄정책이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지난 기간 신규일자리가 10만 8,100개로 23%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에 기록된 역사적 일자리 수 감소(-40%)로부터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임시직을 제외하면 2분기 임금노동자 수는 1.3% 감소했으며(전분기의 경우 -0.7%) 특히 서비스업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졌다(-1.9%). 당연히 고용도 보건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임시직을 제외한 임금노동자는 숙박 및 음식점에서 7.6%(8만 2,800개) 감소하여 2015년 초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사 서비스

업과 운송업도 각각 2.9%, 1.3%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은 1분기에 0.3% 감소를 기록한 이후 추가로 2만 8,4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0.9%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1분기에 0.2% 감소한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5만 7,000개(-1%)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INSEE는 공공 서비스에서도 보건위기로 인해 비정규 및 임시계약의 갱신이 제한되었다고 강조한다.

지난 1년 동안 임금고용은 총 57만 2,900명(-2.3%) 감소했으며 이 중 민간부문은 51만 3,800명, 공공 부문은 5만 9,100명을 차지했다. INSEE는 올해 상반기에 기록된 감소분이 지난 2년 동안의 증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연말 기준 약 9.5%의 실업률을 예상한다. 이는 2020년 중반보다 2.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¹⁾

1) Les Echos(2020.9.8), "Plus de 150.000 destructions d'emplois au deuxième trimestre, selon l'Inse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conjoncture/plus-de-150000-destructions-demplois-au-deuxieme-trimestre-selon-linsee-1240322>

프랑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건강취약계층 직장으로 복귀

정부가 반복하여 바이러스와의 공생을 강조함에 따라 팬데믹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는 심장병, 당뇨병 또는 고혈압 환자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그 가족에

게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부 장관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과 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란(Olivier Véran)은 2020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건강취약' 노동자와 보호자들에게 부분

실업 등의 제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9월 1일을 기점으로 이들의 근로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단, 정부는 그 전주에 법령을 발표하여 근로 재개 행정명령으로부터 면제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화학 요법, 이식, HIV 감염 등에 의해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진행성' 암을 치료 중인 자와 중증 신부전 또는 투석 환자는 대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면제대상을 규정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은 공중보건 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의 과학자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프랑스 환자 이해대변협회(France Assos Santé)의 요구에 의해서였다. 협회는 이미 3월에 초기 기본적인 틀을 구상하였고, 최근 몇 주 동안은 직장 복귀령에서 취약층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키

기 위해 교섭을 벌였다. 협회 회장 제라르 레이몽(G rard Raymond)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최소한 건강취약계층은 허용 가능한 조건 내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직장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6월 30일 공중보건 고등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재택근무가 선호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의 통근과 사무실 근무를 위해 수술용 마스크를 구비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근로 중단에 혜택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직장 복귀의 대상이 된다. 육아를 이유로,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일을 하지 않은 민간부문 직원은 5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근로를 재개했다.¹⁾

1) Les Echos(2020.8.31), "Coronavirus : certains travailleurs vuln rables vont reprendre le chemin du travail",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coronavirus-certains-travailleurs-vulnerables-vont-reprendre-le-chemin-du-travail-1238102>

핀란드 : 사회보건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실험 필요성 주장

핀란드 사회 보건부 장관 아이노-카이사 페코넨(Aino-Kaisa Pekonen)은 현 정권 임기 내에 공기업 및 공공부문에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돌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¹⁾

그녀는 일 6시간 근로뿐 아니라 주 4일 근로 등 다

양한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 병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페코넨 장관은 정부가 다음 예산 배정 시, 근로생활 및 고용시장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이 때 다양한 방식(일 6시간 근로, 주 4일 근로



등의 근로시간 단축 실험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방식의 실험은 어떤 방식이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로생활과 일자리 창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고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좌파연합당(Left Alliance Party)과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 역시 여당이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실험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1) Helsinki Times(2020.8.28), "Finland should trial six-hour workday or four-day work week, says Pekonen",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politics/18015-finland-should-trial-six-hour-workday-or-four-day-work-week-says-pekonen.html?utm_campaign=Finnish%20government%20is%20urged%20to%20trial%20shorter%20working%20hours&utm_medium=email&utm_source=HumanTimes

일본 : 재택근무자 빠르게 줄고 특정 노동자만 재택근무 지속¹⁾

일본 내 근로자의 근무 형태 중 재택근무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택근무는 지난 4월 7일 1차 긴급상태 선언을 전후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의 패널조사²⁾에 따르면 정상출근으로 돌아간 사람이 적지 않다. 재택근무가 가장 활발하던 5월 둘째 주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8%였으나 7월 마지막 주에는 49.8%로 늘어났다.

할 수 있었다. 재택근무의 적용 비율은 업종이나 직종, 기업 규모 외에도 성별, 학력, 근속연수, 보직 유무, 개인 연봉,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을 보면 여성(57.3%), 중·고교 졸업(65.6%), 건설업(84.8%), 도소매업(62.3%), 서비스직(78.9%), 기능 노무직(77.8%), 근속 5년 미만(56.2%), 연봉 300만 엔 미만(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재택근무를 3일 이상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보통신업(55.6%), 수도권 1도 3현³⁾ 거주자(43.5%) 등에서 높았다.

또한 7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비교한 결과, 노동자의 다양한 속성에 의해 재택근무 유지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

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高見具広)(2020.9.16), 「在宅勤務は誰に定着しているのか」, https://www.jil.go.jp/researcheye/bn/046_200916.html
2)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8.26),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の仕事や生活への影響に関

する調査)(一次集計)結果」, <https://www.jil.go.jp/press/documents/20200826.pdf> 해당 패널조사는 4월부터 이루어졌으며 7월 말까지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3) 편집자 주: 수도권 1도 3현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을 일컫는다.

일본 : 아베 내각 고용정책 평가 - 비정규직 증가 및 실질임금 감소¹⁾

아베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고용창출과 노동격차 해소에 관한 평가이다. 아베 총리는 사임을 발표하는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4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취업자 수는 약 465만 명이었으나 이 중 약 350만 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35.2%에서 38.3%로 높아져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큰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7월 통계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자는 1년 전에 비해 131만 명이 감소하였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쉽게 해고된 것이다.

아베 내각은 “관제춘투(官製春闘)²⁾를 통해 임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주요 기업의 임금인상률이 7년 연속 2%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1) 朝日新聞(2020.9.8), 「増えた雇用、多くは非正規8時間働けば暮らせる社会は」,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976WVKN94ULFA02Y.html?iref=pc_ss_date

毎日新聞(2020.9.3), 「残された課題／5社会保障・雇用 経済成長優先、色濃く」, <https://mainichi.jp/articles/20200903/ddm/003/010/095000c?pid=14606>

2) 편집자 주: 관제춘투(官製春闘)란 매년 봄에 진행되는 노사 간의 임금협상 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 중국 내 65

세 이상 인구는 약 1억 7,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세계은행 보고서는 2050년까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¹⁾ 최근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 노동력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고령 노동자는 주로 요식업, 보안 및 청소 서비스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저소득층 출신이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여러 지역에서 구인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 집단은 일부 기업의 구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지만,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이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횡령하는 등과 같은 노동권 침해 상황이 누차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노동자가 법에 따라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계약법 실시 조례」 또한 노동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정년이 된 후 기초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노동자가 정년이 된 후에도 계속 일을

할 때는 고용자 측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고령 노동자와 고용자 측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자 측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령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²⁾ 실제로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용주가 고령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남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³⁾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다. 첫째, 고령 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령 노동자와 고용자 측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사법적 해석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지 않도록 각급 인사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통일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⁴⁾

- 1) 騰訊網(2020.8.30), 「超齡勞動者維權難, 誰為他們撐腰?」, <https://new.qq.com/omn/20200830/20200830A0J2U800.html>
- 2) 華聲新聞(2020.8.31), 「超齡勞動者權益不能被忽視」, <http://opinion.voc.com.cn/article/202008/202008311133267222.html>
- 3) 中工網(2020.8.27), 「超齡志工維權, 頻遇“老大難”」, <http://right.workercn.cn/147/202008/27/200827073710202.shtml>
- 4) 騰訊網(2020.8.30), 「超齡勞動者維權難, 誰為他們撐腰?」, <https://new.qq.com/omn/20200830/20200830A0J2U800.html>

중국 : 농촌 지역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2020년 9월 10일 중국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무원 감사실에서 일부 지역의 감찰을 실시한 결과 구이저우성(貴州省) 다팡현(大方縣) 지방정부가 교사들의 임금 보조금을 거액 체납하고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교사들의 임금 보조금을 체납하기 시작해 2020년 8월 20일까지 4억 7천 961만 위안(약 827억 원)에 달하는 교사 성과급과 생활보조금, 사회보험 등을 체납했고 그중 3억 4천 194만 위안(약 590억 원)을 교육 특별 자금 경비로 유용했다.¹⁾ 이 사건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 문제와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농촌 지역은 교사 수의 절대적 부족과 우수한 교사 자원의 부족, 교사의 질 향상 필요성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농촌 지역 교사의 낮은 급여, 열악한 복지 제도와 생활환경, 부족한 승진 기회, 직업적 자존감과 성취감의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현실적 조건이 놓여 있다. 특히 빈곤한 외딴 지역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²⁾ 현재 교사의 임금 지급은 기본적인

로 현급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교사들의 임금 지급에 곤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현급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상 교사의 인원수가 가장 많은 데 비해 발언권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체납하거나 횡령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에 대한 임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낙후한 외딴 지역의 경우 성급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기금을 마련해 교사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³⁾ 국무원은 2017년 9월에 “교사의 평균 임금이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임금보다 낮지 않거나 높아야 한다”라는 원칙적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⁴⁾ 2020년 8월 28일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신시대 농촌 교사 양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농촌 지역 교사 일자리 공급과 교사 전문성 개발, 교사의 지위 및 대우 보장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⁵⁾

- 1) 新京報網(2020.9.5), 「5年拖欠教師工資4.79億, 羞辱了“大方縣”這個名字」, <http://www.bjnews.com.cn/opinion/2020/09/05/766012.html>
- 2) 澎湃(2020.9.4), 「【社論】善待300萬鄉村教師」,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029359
- 3) 新京報網(2020.9.5), 「5年拖欠教師工資4.79億, 羞辱了“大方縣”這個名字」, <http://www.bjnews.com.cn/opinion/2020/09/05/766012.html>
- 4) 澎湃(2020.9.14), 「媒體評“特崗教師工資被拖欠”: 不要辜負年輕人的教育理想」,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174215



5) 澎湃(2020.9.4), 「【社論】善待300萬鄉村教師」,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029359

브라질 : 비공식 가사노동자 100만 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어

코로나19 전염병의 여파로 브라질 가사노동자의 약 20%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590만 명(전체 취업자의 6.5%)에 이르던 가사노동자가 6월에는 470만 명(전체 취업자의 5.7%)으로 집계돼 약 120만 명(21.1%)이 감소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가사노동자의 90%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 노동자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3개월 사이에 총 33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규모가 줄었다. 이에 반해 공식 고용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의 감소는 22만 9천 명에 그쳐 비공식 가사노동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올해 6월 기준 가사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932헤알(약 20만 원)이며, 공식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는 1천 285헤알(약 27만 원), 비공식 가사노동자는 780헤알(약 16만 8천 원)로 집계돼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득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및 일의 세계(Democracia e Mundo do Trabalho

em Debate: DMT) 코디네이터 비르기니아 도노소(Virginia Donoso)는 “코로나19 전염병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 및 실업 보험으로부터 배제된 가사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으며,¹⁾ 노동조합 연구기관 Dieese는 가사노동은 주로 흑인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으로, 브라질에 여전히 존재하는 노예제 노동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공식성, 노동법 적용 배제, 저임금의 특징을 지닌다고 분석했다.²⁾ 지난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이후 브라질에서도 2013년 헌법 제7조를 개정하여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연말 보너스, 하루 8시간 노동, 휴가 보장 등 노동법에 규정한 일부 권리를 보장하였다.³⁾ 그러나 전체 가사노동자의 70%는 여전히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비공식 고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사노동은 브라질에서 가난한 여성의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된다.

1) Themis(2020.9.3), “Brasil perde mais de 1,2 milhão de postos de trabalho doméstico em três meses, aponta IBGE”, <http://themis.org.br/brasil-perde-mais-de-12-milhao-de-postos-de-trabalho-domestico-em-tres-meses-aponta-ibge/>

2) <https://www.dieese.org.br/estudosepesquisas/2020/estPesq96covidTrabalhoDomestico.html>

3) 브라질은 2013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trabalho doméstico)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사노동자 보완법(Lei das Domésticas, Lei da Complementar no 150)」을 제정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지속적이고 종속적이며 개인이나 가족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주당 2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초과근무 및 수당 적용,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당 노동일이 2일 미만인 노동자와 일일 노동자(diaristas)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브라질 : 브라질 노총 CUT, 9월부터 청년 조직화 캠페인 진행

브라질 노총 CUT(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는 독일 노총(DGB)의 지원을 받아 9월부터 청년 조직화 캠페인(‘Segue o Fio’)을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 방식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해 이루어진다. 캠페인이 시작된 9월 5일에는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노동조합 청년사업 담당자들과 문화 예술가들이 함께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 세계의 변화와 4차 혁명’, ‘현대판 노예제 노동’, ‘나라별 문화적 차이와 불평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벌였다. CUT 청년부장인 크리스티아나 파이바 고메스(Cristiana Paiva Gomes)는 “브라질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노동법 개혁으로 인해 아웃소싱, 우버화, 간헐적 고용계약 등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동조합 운동 등, 집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직 결성에 디딤돌이 되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CUT의 캠페인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인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노동·사회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¹⁾ 브라질 국립통계원 자료(Pnad Continua, IBGE)에 따르면, 브라질 청년들의 실업률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2020년 일사분기만 하더라도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중 27.7%가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청년층의 구직 활동 비율은 최대 40%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²⁾

1) CUT(2020.9.4), “CUT lança campanha para mobilizar jovens de todo o país”, <http://www.cutbrasil.org.br/site/2020/09/04/cut-lanca-campanha-para-mobilizar-jovens-de-todo-o-pais/>

2) <https://www.redebrasilatual.com.br/trabalho/2020/09/cut-lanca-campanha-segue-o-fio-para-unir-a-juventude-trabalhadora/>